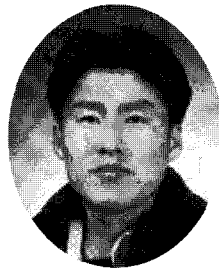


식량은 주권 · 인권 · 안보 '식량권' 무엇보다 앞서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26.9%, 쌀 제외하면 5%에 불과한 위험국가
쌀 개방 보다 쌀 자급이 절실, 비교우위론 리스크 간과 말아야

올 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크 다우프 사무총장은 2003년 10월 31일 "세계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쌀 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면서 쌀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 약 8억4천만 명 중 절반 정도가 쌀을 주식이나 소득, 고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2004년을 '쌀의 해'로 선정했다.

UN은 작년에는 '세계 물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 인류의 자원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올해를 '쌀의 해'로 선포한 것은 세계 식량위기 사태를 경고하는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의존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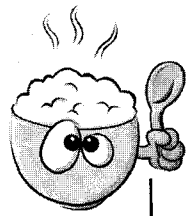
하는 주식인 쌀이야말로 기아 퇴치의 희망이며 인류번영의 절대적 선결과제를 전 인류에게 선포한 것이다.

최대 위기 맞는 '우리 쌀'

불행히도 '세계 쌀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는 1만 5천년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쌀이 최

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쌀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호주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를 기본으로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쌀 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2003년 760만석이던 재고량이 올해는 670만석으로 크게 줄어 자급률이 93.1%(농림부 전



망)에 불과하고 재고미의 상당량은 연도가 오래 되어 식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정부는 쌀 개방을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의지 없이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농지축소 등 생산 감축을 펴고 있어 식량 사정은 더욱 불안해 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수도권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절반 이상이 장래에 식량사정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사정 전망

구 분	응답 가구수(비율)
현재보다 크게 좋아질 것임	39(5.9)
현재보다 약간 좋아질 것임	65(9.8)
현재와 큰 차이 없을 것임	214(32.4)
식량사정이 약간 불안할 것임	299(45.2)
식량사정이 매우 불안할 것임	42(6.4)
기타	2(0.3)
무응답	(25)
합계	661(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은 '인권 · 주권 · 무기'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교역자유화가 빈곤과 기아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WTO, FTA 등 자유무역체제가 활성화될수록 세계는 기아에 더욱 고통 받고 있다. 현재 8억4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매년 3천6백만 명이 굶어죽고 있으며(시간당 4천명) 세계 인구 7명 중 한 명이 하루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은 인류 생존의 최우선 과제이며 인권의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UN 인권위에서도 WTO가 상품의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면서 사람의 식량권이라는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식량권 보호는 인권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하며, 만약 식량권이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다뤄지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를 국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전 세계 곡물의 80%를 4개의 곡물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의 60%를 카길社(미국계 자본)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식량은 주권이자 안보의 문제이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으로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였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해상봉쇄로 온 국민이 기아에 시달렸고, 인공위성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구소련방도 결정적으로 미국의 밀가루 포대에 무너진 사실을 떠올린다면 자명한 사실이다.

휴대폰 리스크, 목숨 담보 한 위험 도박

식량부족시대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세계는 지금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99년 이후 국제 쌀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인구는 연평균 1.6%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0.5%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곡물시장도 생산(18억3천만톤)이 소비(19억3천만톤)를 따

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고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캘리포니아 중립종의 쌀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만 2배로 상승했으며 옥수수 수출 세계 2위인 중국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정체되고 자국내 소비증가로 재고가 급격히 줄면서 옥수수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제 곡물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식량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식량부족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쌀 개방이 아니라 쌀 자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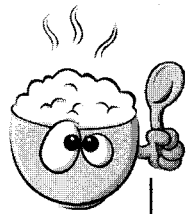
'식량주권' 반드시 지켜야

그렇다면 식량주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째, WTO에 각국의 식량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47개 WTO 회원국 중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며 그나마 수입이라도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농산물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10여 개국의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 협상 일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국을 비롯한 식량수출국들은 자국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은 식량주권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계흐름을 모르는 무뇌아로 치부하는 '오도된 세계화'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2002년 6월 13일에 개최된 세계 식량정상 회의에 참석한 181개국의 대표들은 식량권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이에 앞선 6월 8일 로마에서는 1만여명의 세계화 반대 시위대가 각국이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식량주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세계 60억 인구가 식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WTO에 각국의 식량주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 식량자급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자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26.9%에 불과하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고는 5%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자급률이 일본 다음으로 낮고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자급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하락하게 될 경우 세계 식량수급사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WTO 체제로 인해 수입개방 폭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도 곡물시장이 불안정해 농민들과 국민들 모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더 없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는 유사시를 대비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평균 공급량의 70%에 해당하는 식량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별 식량자급률

국가	자급률 현황	식량자급을 위한 근거법률
스위스	65%	헌법 31조 및 국가경제물자공급에 관한 연방법
스웨덴	129%	헌법 13조 및 국회결의
핀란드	126%	공급보장법
노르웨이	66%	곡물공급법

또 가까운 일본은 세계 최대 식량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식량자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식량자급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기본법에도 식량자급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다. 우리정부도 국민적 합

의를 통해 시급히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학교급식을 자국산 농산물로 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자국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5개월 동안 15만명 서울시민 서명 등 60개가 넘는 시군에서 2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선생님과 학부모까지 나서서 학교급식을 국내산으로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WTO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 국민들의 끈질긴 싸움으로 정부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여도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그동안의 거짓을 고백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급식법에 국내농산물 사용을 규정하여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쌀은 더 이상 쌀이 아니다. 쌀은 목숨이며 쌀은 인권이다. 쌀은 문화이며 쌀은 민족이다. 쌀은 주권이며 쌀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며 평화이다. 세상에 목숨을 내 놓으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 주권을 거래하지는 법은 없다. 쌀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농약정보**